

고리대금 빌려 산단 '도박' ... 한심한 지자체 '네가지'가 없다

나주·함평 사례 보니

나주시와 함평군이 미래일반산업단지(미래산단)와 동합평산단 조성을 추진하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 투융자심사도 받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나주·함평 모두 부랴부랴 최근 심사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시·군은 애초 민간자본만으로 조성하려 했다가 추후 방침이 변경됐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기반시설 설치에 국비나

나주시 관계자도 "지금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했다"고 토로했다. 올해 나주시 예산(4413억여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2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그만큼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고 시가 주체적으로 사업에 나서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함평군도 유사하다. 함평은 나주와 달리 분양책임은 피했지만, 투자금 550억원의 6.2%에 해당하는 이자를 분양 완료 후 갚을 때까지 입금해야 한다. 거기에 이미 금융수수료, 자료료 등 4%까지 합쳐 이미 93억원이 사



함평군이 조성중인 동합평산업단지 부지. 뒤늦게 행정안전부 투융자심사를 신청하면서 공사 착수가 차질피일 미뤄지고 있다. 조성비의 대부분인 550억원을 6.2%의 금리로 빌린 군은 사업기간이 연장될수록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노심초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① 전문성 부족 ... 조성 단계부터 업체에 휘둘러
- ② 책임행정 실종 ... 혈세로 증권사·투자사 배불러
- ③ 도덕성 상실 ... 사전심사 몰랐거나 고의로 회피
- ④ 미래비전 없어 ... 사업 지연될수록 재정 '나락'

지방비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 시·군이 심사대상임을 몰랐거나 고의로 사전심사를 피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투융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이들 사업은 다시 압초에 부딪치게 되고, 사업이 지연될수록 거액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상태는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자체 전문성 미흡, 업체 마음대로 = 나주미래산단 조성 과정의 비리를 수사중인 광주지검 관계자는 '구멍가게'보다 못한 자금 관리체계라며 혀를 내둘렀다. 사실상 투자자 문화사나 특수목적법인(SPC)이 시키는 대로 나주시는 이행만 했고, 계좌 관리도 곳곳에 허점을 드러냈다. 관련 직원은 인사 때마다 수시로 바뀌고, 새로 온 직원은 관련 법규에서 행정절차, 자금 조달 및 소송 등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거의 전반을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자금을 끌어오는데도 금리는 투자자문사 마음대로 조정했다.

라졌다. 투자자문을 맡은 M사가 산단 조성을 맡은 SPC 지분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 업체의 분양 책임은 전체 면적의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는 M사가 군으로부터 매달 3000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분양하지만, 실제로는 군청 내 분양팀이 업체를 소개해주고 뒤처리만 맡는 구조다.

결론적으로 함평과 나주는 사채와 유사한 고리대금을 빌려 산단 조성에 나서고 그 책임까지 모두 맡는 셈이다. 여기에 나주는 265억원, 함평은 63억원의 자체 예산을 산단 조성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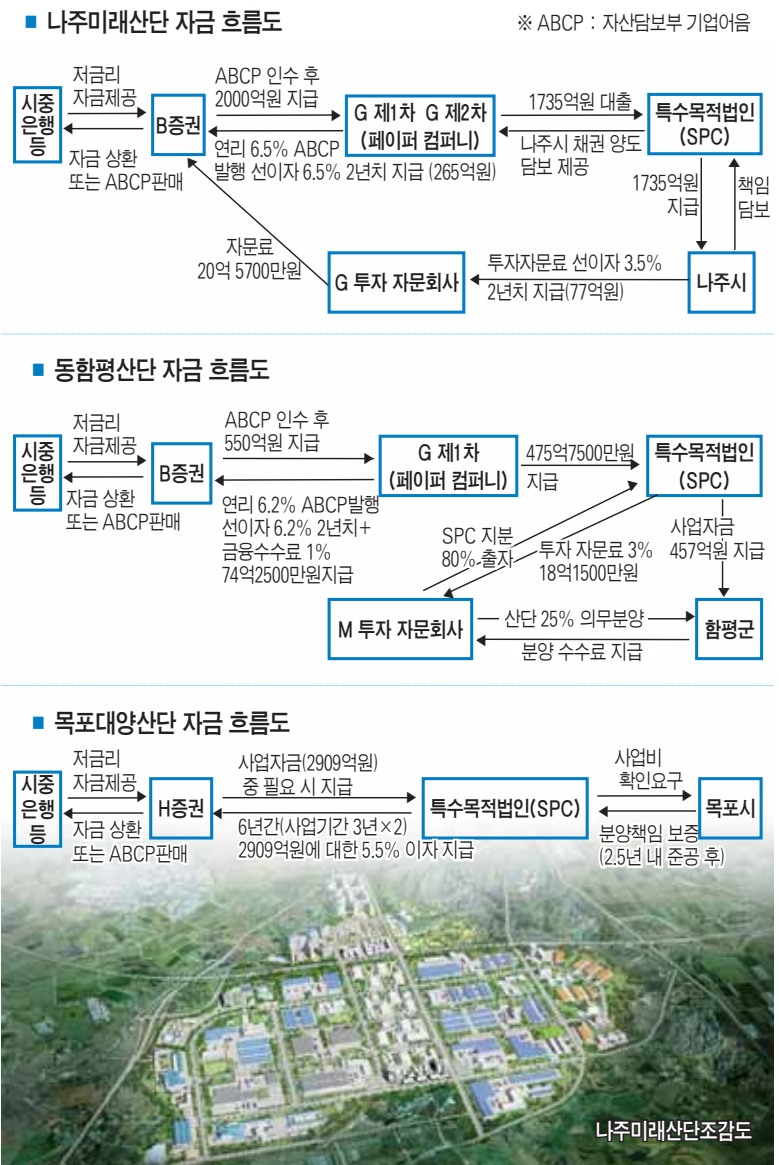
◇이자 부담 눈덩이 공사비만 겨우 남아 = 대출을 하면서 선이자자를 때는 불법 사채업자밖에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증권사로부터 산단 조성자금을 대출하면서 2년치 선이자 부담을 떠안고 있다. 나주시도 2000억원에서 남은 돈은 820억원이며, 오는 5월부터 2000억원에 대한 이자를 내야한다. 시는 금리를 기존 6.5%에서 4%로 낮추고, 중도상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의치 않다. 2000억원에 6.5%의 이율을 적용할 경우 연간이자

는 무려 130억원에 달한다.

◇혈세 촉내 금융기관·컨설팅업체만 배불리는 꼴 = 감사원과 검찰은 이 같은 지자체 산단 개발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사태 등으로 인해 시중은행들이 지자체에 대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회피하면서 그 틈을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이 파고들

었다. 서울 소재 컨설팅업체들이 산업단지 개발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지자체를 공략하고, '솔깃한' 지자체를 증권사와 연결해주는 구조다. 이 기업어음에는 5~6%대의 금리가 붙어 금융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함평 = 황은희기자 hwang@kwangju.co.kr
/나주 = 손영철기자 ycsn@kwangju.co.kr



중앙정부가 보증... 고금리 구조 개선해야

대책은 뭘까

수도권은 물론 광역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가속화하면서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돌과귀를 찾으려는 농촌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의 제약을 받지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면서 고금리, 사업 책임 등을 떠안는 부실 협약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일선 시·군의 시도를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선 시·군들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어 여필 수 없이 부담하고 있는 고금리 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 투융자심사만이 아니라 일선 시군의 산단 조성 방침이 타당할 경우 자금 전체 또는 일부를 보증, 시중은행으로부터 낮은 금리의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지역 발전을 올바르게 '견인'해야 한다는 논리다.

또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서도 드러났듯 일선 시군은 관계 법령, 행정절차, 자금 차입 등 산업단지 조성을 포함한 대규모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전문성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최

철단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민간투자자나 전문업체들이 다양한 금융기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이를 수시로 바뀌는 시·군 담당자가 파악해 조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나 전남도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대해 사업 전반을 조율·조정할 수 있는 전문가를 파견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협약 체결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적절한 제재방안도 시급하다. 나주나 함평 등 최근 문제가 된 시·군에서는 주변 소 개나 추천을 통해 알게 된 투자자문화사와 허술한 협약을 맺고 산업단지 조성에 나섰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송민성 전남대 지역개발학과 교수는 "수도권 집중이 가중되면서 지역의 입장에서 무리수를 두더라도 대규모 사업을 일으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꾀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지금이라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낙후된 농촌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미치겠다. 정말...

국민을 먼저 생각합니다
KB금융그룹

국민행복저축시대

KB국민재형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으로 덜 내고
높은 금리로 더 받고 차곡차곡 모아 더 크게
재형저축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하세요

차곡차곡 모아 큰 재산으로! KB국민재형저축

- 가입대상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고객
- 계약기간 7년 만기해지 시 이자소득세 비과세(농특세 과세) 혜택
- 분기별 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저축 가능

*이 예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구직원 또는 고객센터(☎1588-0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 바랍니다. *은행법상인 심의특 제155호(2013.3.5)

KB 국민은행